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2013 년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요약본

헌법과 기타 법률 그리고 정책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일부 단체들을 제외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들이 스스로 종교를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관행을 보였다. 정부는 계속해서 비공인 종교단체들의 종교활동을 탄압했다. 북한 난민, 탈북자, 선교사, 비정부기구(NGO)의 보고에 의하면, 선교 활동을 수행하는 종교 관계자나 외국인 또는 선교사를 접촉한 주민은 당국에 체포되어 사형을 포함하여 극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언론은 북한에서 주민들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사형을 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북한은 접근이 차단되어 있고 최신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포나 형벌이 지속되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검증하기 어려웠다. 북한 정부는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의식에 외국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종교적인 결연이나 신념 혹은 활동을 이유로 사회적인 억압이나 차별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는 수집할 수 없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다. 2001 년 이래 미국무장관은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의거하여 북한을 종교의 자유를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특별관심대상국(CPC)’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무부는 2011 년 8 월에 북한을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양자회담이나 다자간 국제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북한은 외국 정부의 사절이나 기자 혹은 기타 초청인사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거나 알려진 침해 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갈수록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탈북자가 탈북하는 시점과 현지 인권 실태를 기록할 수 있는 NGO 혹은 정부 당직자를 대면하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탈북자 증언에 기초한 일부 보고는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섹션 I. 종교 인구 분포

미국 정부에 의하면 북한 인구는 총 2,470 만 명으로 추정된다(2013 년 7 월 추정치). 북한정부가 2002 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별 신자수는 개신교 12,000 명, 불교 10,000 명, 가톨릭 800 명이다. 그 보고서는 전통 종교에 기원을 둔 천도교 청우당이 정부 승인 하에 약 15,000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및 기타 외국 종교단체들은 북한의 신자 수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양에는 두 곳의 개신교 교회(봉수교회와 칠골교회)와 장충성당 그리고 러시아정교회 등 4 곳의 기독교 교회가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칠골교회는 고 김일성 주석의 생모이자 장로교 집사였던 강반석의 기념교회로 설립되었다. 이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러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양 밖에서 거주했던 다수의 탈북자들은 이들 교회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보고했다.

유엔인권이사회 2009 년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일환으로, 정부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가톨릭협회, 조선천도교협회, 조선종교인협회 등의 종교기관들이 존재한다고 보고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정부가 설립한 조선가톨릭협회는 장충성당에서 기본적인 예배의식을 거행하지만 로마 교황청과는 유대관계가 전혀 없다. 북한에 상주하는 가톨릭 신부들은 없지만 임시 거주하는 신부들이 가끔씩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다.

북한을 방문했던 종교지도자들에 따르면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개신교 목사들이 있지만 이들이 상주 목사인지 혹은 임시 거주 목사인지는 확실치 않다.

러시아정교회는 2006년 평양에 문을 열었다. 모스크바 러시아정교회 신학대학에서 수학한 2명의 북한 주민이 서품을 받았고,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사목활동을 펼치기 위해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002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500개소의 '가정 예배소'가 있다. 하지만 2013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그러한 예배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가정 예배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하부 조직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2013년도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연차보고서와 2013년 통일연구원 백서 <창살 없는 감옥>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신뢰할 만한 보고들이 접수되고 있지만 지하 교회의 존재 여부와 지하 종교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는 여전히 검증이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다. 일부 비정부기구와 학계에서는 최대 수십만 명의 지하교회 신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대규모 지하교회 조직의 존재에 의문을 표시하거나, 지하교회 신도수를 정확하게 추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지하교회에서 이뤄지는 예배는 그 규모가 매우 작고 대개 일반 가정 단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난민들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 접경 지역에서 개인이나 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당국의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관련물을 입수할 수 있으며 비밀리에 종교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60 개의 불교 사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찰들은 사적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일부 사찰에서는 종교 활동이 허용되고 있다. 승려들은 다수의 사찰에서 관리인 역할을 하는데 외국 방문객들에 따르면 승려들이 불교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탈북자 증언에 근거한 2013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불교경전에 대해 들은 바가 없고 승려를 본 적이 없다. 국영 언론은 북한 내 여러 장소에서 법회가 열린다고 보도한다.

섹션 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부 인식 현황

법적·정책적 토대

헌법과 기타 법률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또한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사회 안정을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 년도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며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신자들이 가정 예배소와 기타 시설에서 자체 종교규칙에 따라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경을 비롯한 종교물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주체’ 사상은 여전히 정권의 중요한 이념적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고, 고 김일성 주석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김정은에게 확대되었다.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국가와 사회의 필요를 대변하는 최고 권위자로서의 지도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는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간주되어 가혹한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주체사상과 김씨 일가 숭배는 민간종교의 형태를 닮았다고 주장한다. 약 10 만개의 주체연구센터가 북한 전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행

실제로 정부는 종교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였으며, 공인된 관변 단체들에 의해 감독을 받는 종교 활동만을 용인하고 있다.

정부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종교 활동 참가자를 포함하여 모든 반대 세력들을 엄정히 다스렸다. 해외 종교·인권 단체들은 지하 교회 신도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체포·구타·고문·살해되었다는 다수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8 만~12 만 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외딴 지역의 정치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이 중 일부가 종교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월에 중앙일보는 성서 소지, 외국 TV 드라마 시청, 매춘 등의 죄목으로 북한 주민 80 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대규모 공개 처형은 전국 7 개 도시에서 11 월 3 일에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에 인용된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원산의 경우 경기장에 1 만 명의 주민이 동원되어 8 명의 사형수가 총살을 당하는 광경을 관람한 것으로 보도됐다.

워싱턴 D.C. 소재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는 2012 년도 보고서 <성분: 북한 사회분류시스템(*Songbun: Marked for Life, North Korea's Social Classification System*)>에서 모든 종교인은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종교가 정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가족의 계층을 구분하는 사회정치적 체제인 ‘성분’ 내에서 가족의 계층을 구분하는 요소로 이용된다고 밝혔다. 보편화된 성분 체제에 따라 교육과 보건, 취업기회, 거주지, 결혼상대에 대한 접근권이 결정된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탈북자들은 최근 수년간 비공인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조사, 억압, 박해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보고했으나, 현 상황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내와 중국 접경 지역에서의 종교 관련 인사들 간의 접촉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정부 관행에 있어서 종교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2013 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 종교단체들을 외부 정치 선전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였으며 주민들이 종교 시설을 출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다. 일반 주민들은 대개 종교 시설을 ‘외국인 관광지’로 인식했다. 북한 현지에서 정부가 후원하는 종교단체 대표들을 만나본 외국인들은 일부 관계자들이 실제 교인으로 보였지만 나머지는 교리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통일연구원은 지방에 교회나 종교 시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일반 주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북한 종교인들의 일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정부가 통제하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지하 교회 신도들이나 선교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을 체제전복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부가 정부 승인 교회에 기부된 자금과 물자를 (북한 내 유일한 정당인) 조선노동당으로 보낸다는 보고도 있었다. 확인되지 않은 보고에 의하면 신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 정부 조직에서 중간관리자급의 보직에 채용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그런 배경을 가진 주민은 가끔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심지어 투옥되는 등 광범위한 차별을 겪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선의 문화유산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일부 불교 사찰과 유적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북한 정부는 중국 북동부 접경 지역에서 한국 종교단체들의 후원을 받아 수행되는 구호 및 난민 지원 활동에 인도주의적 목적뿐만 아니라 정부 전복 등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이 단체들이 첩보 수집에 관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일부 종교 관련 해외 구호 단체들의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을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북한 내 전도활동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주민들과의 접촉에 제한이 있었고 정부 수행원으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평양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일부는 이들 교회에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었다. 북한을 방문했던 일부 외국인들은 교회 예배가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고 설교에 종교적인 내용과 함께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북한을 방문했던 다른 외국인들은 일부 예배 참석자들이 진심으로 참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성직자들이 진짜 성직자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했다. 지난 몇 년간 평양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했던 외국의 의원들은 관광버스를 탄 신도들이 단체로 교회로 수송되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국인들은 현지 신도들과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외국인들은 신도들과 제한된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준을 외국인이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만, 정부가 종교단체들을 철저히 감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2013년도 통일연구원 백서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에 교구를 운영하는 공인 종교단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종교행사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 정부는 개신교 목회자와 불교 승려를 양성하는 3년제 신학대학, 김일성 종합대학의 종교학 관련 학과, 사제를 양성하는 대학원, 전술한 종교단체들과 관련된 기타 신학대학들에서의 종교교육을 허용했다.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국가보위부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국경 지대에서의 종교 활동을 막기 위해 치안 활동을 강화했다.

섹션 III.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현황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시각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탈북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종교적 실천가들은 자신들의 종교활동이 당국에 보고될 것을 두려워하여 종종 이웃이나 직장동료, 사회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비정부기구들은 각각의 지하교회가 잘 구축된 조직망을 통해 다른 지하교회들과 연계돼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인들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로교회(미국)는 봉수교회에서 주관하는 인도주의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국내 최대 불교 교단인 조계종 대표단이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 방북 행사는 한국 불교계의 지원으로 추진된 신계사 복원 6 주년을 기념하여 실시됐다.

섹션 IV. 미국 정부 정책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식 외교 사절도 파견되어 있지 않지만, 인권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 문제를 다루려고 하였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특히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2001 년에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최근에는 2011 년 8 월에 특별관심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1998 년 국제종교자유법 규정에 의거, 미 국무장관은 1974 년 통상법(잭슨-바닉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수정법) 제 402(c)(5)조와 제 409 조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시행했다. 미국 정부는 다자간 포럼이나, 특히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국가 정부들과의 양자 회담 등의 기회를 빌어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 문제 해결이 양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을 대폭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종교자유국 관계자들과 대북인권특사를 포함한 미국 정부 관리들은 탈북자 및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회원들과 만남을 가졌다.

3 월에 미국은 북한의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 년간 조사위원회(COI)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이 결의안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의견 일치 방식으로 채택됐다. COI 는 8 월부터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서 공개청문회를 개최하여 종교의 자유 억압 실태를 포함하여 북한 인권 유린 실태에 관한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했다. 북한은 COI 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COI 가 현지에서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